

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가 엄정하고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16.(수) 동아일보(온라인),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‘1년 이상 장기미제’ 기사 관련

<주요 기사 내용 >

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은 가운데,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수사 진행 중
-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 60%는 1년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인 ‘장기 미제’
- 올해 기준 전국의 중대재해 수사 부서 정원 충원율은 57%에 불과한 실정

2. 설명 내용

-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 하에 현장 조사, 증거자료 확보 및 관계자 조사, 법리 검토 등 엄정하게 수사 진행 중
-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, 고의·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방대한 자료 검토가 불가피하여 수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
- 노동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동감독관 인력 증원·조직 개편,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, 검·경과의 협업 강화 등을 지속 추진
- ① '22년부터 중대재해 수사 부서* 및 감독관**을 지속적으로 확대

* 수사 전담 부서: '22년 7과 2팀 → '24년 13과 2팀 → '26년 34과 1팀

** 노동감독관 정원: '22.1월 100명 → '24.1월 138명 → '24.7월 233명 → '26.2월 529명

② 경력 단계별 맞춤형 수사 교육과정* 신설 및 확대, 쟁점 사건 대상 본부-지방관서 검토회의, 학습조직 운영 등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 노력

* (신규자) 고의·인과관계 등 주요 법리 교육 및 수사 보고서 사례 실습
(재직자) 쟁점별 수사보고 및 압수수색 실습, 영장신청서 작성 방법 등

③ 노동부 - 대검찰청 정기 수사 협의회('25.9월~), 노동부 파견 검사 등을 활용하여 장기·쟁점 사건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 논의

④ 경찰과의 긴밀한 수사공조체계 구축, 노동감독관 경찰청 파견(7명)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수사 효율성 제고도 추진

□ 이에 따라,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(사건처리/발생건수)*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동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* '22년 22.7% → '23년 34.3% → '24년 35.2% → '25년 42.4% → '26.6월 44.8%

○ 인력 충원율의 경우, 올해 중대재해수사부서 정원의 급격한 확대(+295명, +127%)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, 계속해서 인력 충원을 해나갈 예정

□ 우리 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앞으로도 엄정하면서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	책임자	과 장 이경제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 정해엽 (044-202-8953)
		담당자	사무관 이호준 (044-202-8952)

